

딱딱한 삶에... 끊이지 않는 생계형 범죄

돌멩이 들고 편의점서 “10만원 달라”...문구용 칼 산 뒤 강도 돌변
범죄자 50대 이상이 상당수...경찰 조사서 ‘배고픔’·‘생활고’ 호소

설 연휴기간이었던 이날 초 광주 서구의 한 원룸에서 홀로 살던 김모(55)씨는 수개월간 밀린 월세를 독촉받던 중 쫓겨났다. 김씨는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왔지만, 설 연휴라 일거리도 떨어져 갈 수 있는 곳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뿐이었다. 터미널 내 서점 등에서 노숙을 하며 라면으로 끼니를 이어오던 그는 설을 하루 앞둔 4일, 마지막 남은 돈마저 떨어졌다. 이들을 굶은 김씨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일 새벽 길가에 있던 달걀 크기의 돌멩이를 쥔 채 주머니에 넣고 24시간 영업중인 터미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편의점 여종업원(26)에게 “10만원만 달라”고 했고, 여종업원이 거세게 저항하

자 주머니에서 돌멩이 꺼내 위협했다. 김씨는 당황한 나머지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5시간만에 터미널 내 서점에서 잡혔다. 설 연휴 다음날인 지난 7일에는 광주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문구용 칼을 산 뒤 강도질을 하려던 박모(60)씨가 붙잡혔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설픈 강도행각에 나선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탓에 결국 구속됐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박씨는 경찰에서 “명절인데 날씨는 춥고 일자리는 없고, 생활비도 떨어져 못할 짓을 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광주·전남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울어들어서도 생계형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생계형 범죄의 경우 큰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와 달리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즉흥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실제 생계형 범죄자 중 대부분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배고픔’과 ‘생활고’ 등을 호소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13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광주·전남 생계형 범죄(강도·절도)로 추정되는 단순 강·절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1만 5823건, 전남은 1만 6397건이었다. 특히 생계형 범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6~2017년 6614명 중 1502명(23%)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절도 피의자는 51~60세가 1776건(19%)으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를 잃은 50대 이상 중년이 생계형 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자를 잡고 보면 대부분 노숙 생활을 하거나 취약계층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많다”면서 “이들의 사회적응과 자활을 지원할 보호관찰관 확충, 직업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만 563건이던 1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건수는 2016년 1만 4810건으로 4247건(40.2%) 이상 늘었다. 1만~10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건수는 같은 기간 3만 9566건에서 5만 1551건으로 1만 1985건(30.2%)이, 10만~100만원 절도범 검거건수는 11만 2486건에서 12만 3225건으로 1만 739건(9.5%)이 증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자택 경찰 경비 예정대로 연내 철수

경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철수된 의경 인력은 전역 시점까지 일선 치안현장 등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 과거에는 80명 규모였으나 지난해 20% 감축해 지금은 60여명이 근무 중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본 10년·최장 15년간 경호처 주관으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하는 기간에도 경찰은 의경 인력을 지원해 자택 외곽경비와 순찰을 담당한다. 현재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경호업무를 넘겨받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전두환·이순자, 노태우·김옥숙 부부와 고(故)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다. 다만 의무경찰 부대가 철수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근접경호는 직업경찰관들이 계속 담당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직무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경찰관은 각 5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생3모작 신중년 학습단’ 발대

13일 광주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인생3모작 신중년(아동, 실버) 학습단’ 발대식에서 학습단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학습단은 오는 11월까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전통놀이와 레크레이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검찰, ‘5·18 망언’ 고발사건 수사...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극우 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검찰이 수사부서를 배당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부서다. 앞서 정의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씨의 공청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이어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5·18 기념단체들이 지씨와 공청회 주최 의원들을 고소·고발했고,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도 13일 오후 고소·고발장 제출을 예고하는 등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달 남은 조합장 선거 광주·전남 혼탁 구속·고발·수사 입후보자 10명 넘어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품 살포로 구속자가 나오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입후보자도 10명을 넘어서었다. 13일 광주지검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입후보자는 4건(4명)이다. 금품 제공 3건, 음식 제공 1건이다.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 A(62)씨는 현금 2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에서도 후보자들이 조합원 협회에 300만원을 후원하거나 상품권, 음식을 제공하다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현재 고발 5건(6명), 수사 의뢰 1건, 경고 18건 등이다. 기부행위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 인쇄물을 통한 불법 홍보 1건 등은 고발됐다. 장흥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활동하는 산악회와 마을 행사에

찬조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담양의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자는 조합경비로 3년여간 15명에게 경조사비 150만원을 건넸다. 여수의 한 입후보자는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13명에게 7만~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에 대납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조합원 6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 화장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광주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주경찰은 지난달 2일 주민에게 30만원이 든 돈 봉투와 조합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자 C씨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자(신고전화 1390번)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윤장현 전 시장 불참 속 재판 ‘공소사실 재검토’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과 윤 전 시장 측이 공방을 펼쳤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50)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상태인 김씨는 지난 준비기일에 출석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했으며, 이날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송금하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 4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불출마 선언 전날인 지난해 4월 3일까지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사지숍 업주와 다툼 뒤 방 돌아다니며 손님들 내쫓아

○-마사지숍 업주와 다툼 뒤 업소 내 방을 돌아다니며 강제로 문을 열어 마사지를 받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은 50대가 경찰서행. ○-1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6일 새벽 0시 1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마사지숍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야 이 XXXX야”라고 욕설을 하

고 마사지 방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어 손님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여분간 가게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 예약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는데, 업주가 성질을 부리면서 나가라고 해 순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1749802

878118009

point

12 point

10 point

8 point

6 point

5 point

4 point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강선 눈도양빌딩

문의 1566-9988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